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제고 방안

Improving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s

장인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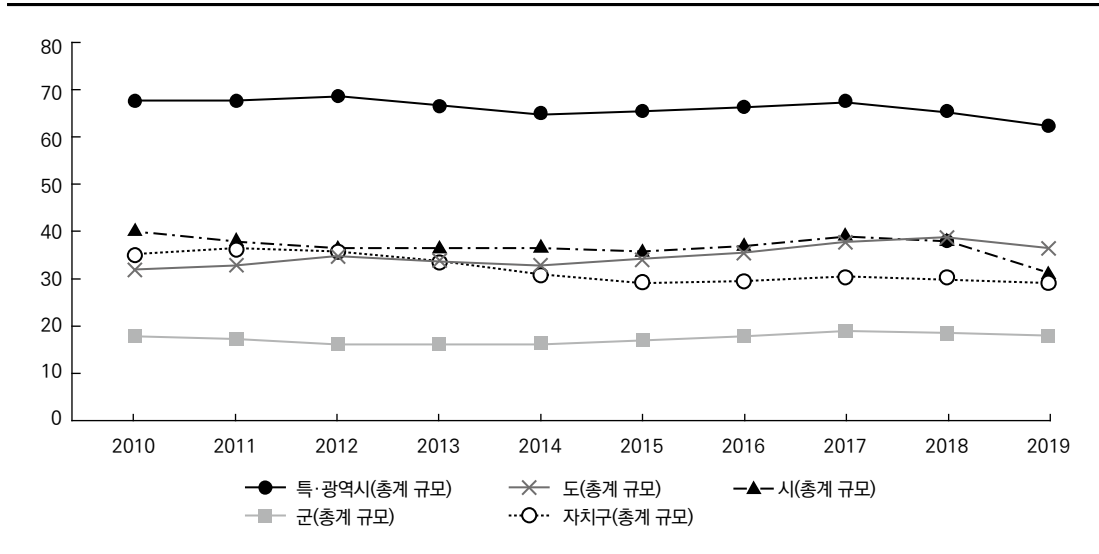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 재정 여건 악화 개연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체적인 자원 조달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제도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직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 자체적인 자원 조달을 위한 지역경제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 및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의도에 더욱 부합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자치재정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 논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논의, 추진된다면 현재의 낮은 자치재정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려 지자체의 실질적인 책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들어가며

1995년 지자체장 선거 시행을 기점으로 추진된 지방자치제도는 국가 균형 발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헌법 제8장 제117조, 118조에는 지방자치제도의 주된 특징과 제도 운영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이 제도를 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여러 근거 중 하나로 자원 자체 조달 정도 악화 양상을 제시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자체 수입 확보 능력과 재정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양상이 바로 그것이다. 재원의 자율적 사용¹⁾과

그림 1.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추이(2010~2017년)



자료: 행정안전부. (2019).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8에서 2020. 1. 25. 인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별개로 이 글에서는 재원 확보에 주목하여 재정 자립이 재원 사용이 아닌 재원 조달 측면인 세입의 자율성과 더욱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 즉 재원 조달의 자체성 정도가 낮다면 중앙정부-지자체 간 세원 불균형 구조하에서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체 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한 세입은 감소할 개연성이 높다. 이로 인해 자율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자

치분권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의 심화는 국가 균형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 수입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의도와 가장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방의 자치재정 여건 제고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의도 퇴색이 우

1) 지자체가 스스로 충당하지 못하는 예산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는 세출 측면에서는 용도제한 금지(용도 지정 조건 없이 자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측면에서 자율적 사용이 가능한 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세입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내국세 및 종부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존 재원의 특징 역시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유 재원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재원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려되는바 지자체의 일반 재원 중 중앙정부 지원(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양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자치행정) 스스로 노력하여 해결하는(자치재정)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재정 측면에서는 지속적 한계를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창균, 2015). 더욱이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인구 변화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같은 자치재정 확보와 관련된 한계 상황이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 심화, 자체적 수입 확보에 대한 동기 부여 약화 양상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자체 인구 특성과 재정자립도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인구 변화에 따른 지자체 재정 여건의 악화 개연성을 더욱 심도 있게 관찰하고, 지자체의 자치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2. 지자체 인구 특성과 재정자립도 간 연관성

가. 분석 자료

현재의 지자체 인구 특성과 재정자립도 간 연관성에 대한 양상을 더욱 정교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통

계청에서 집계, 구축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집계 자료(2006년, 2010년, 2014년)를 활용하였으며, 모형의 종속 변수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²⁾를, 독립 변수로 지자체별 단위 인구 대비 종사자 수(기초지자체의 경제 특성 대리), 노인인구 비율(인구 변화 측면), 주민등록인구(인구의 양적 수준 측면), 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율(인구의 양적 변화 측면), 수도권 더미, 면적(이상 지역 측면)을 공히 투입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 비율(인구구조 특성) 간 연관성의 개연성에 대한 논거로 다음을 전제하였다. 즉 지방세입의 주요 원천인 취득세가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상기할 때,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약화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부적 연관성에 대한 개연성은 노인인구 비율과 지방재정 세입, 재정자립도 간 각각의 부적 연관성에 대한 실증 연구(김종순, 2018)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분석 방법

1) 전역적·국지적 모란지수의 적용

먼저 전역적·국지적 모란지수를 적용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분포의 공간적 군집 양상을 확인하였다. 전역적 모란지수는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을 살펴보기 위한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정적(유사한, +) 공간적 군

2)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위한 자금의 자체적인 조달 정도를 뜻하는 지표이므로 재정 자립 여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글의 의도와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집을, -1에 가까울수록 부적(이질적인, -) 공간적 균집을 의미한다. 또한 국지적 모란지수는 지역적 모란지수를 통해서도 공간적 균집의 구체적인 양상(위치)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지적인 균집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찰 지역이 국지적 균집을 형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2) 공간계량모형(spatial econometric model)

또한 관찰 변수의 공간적 의존성, 이질성을 고려하여 더욱 정교한 변수 간 연관성 추정 가능한 공간계량모형을 실증 분석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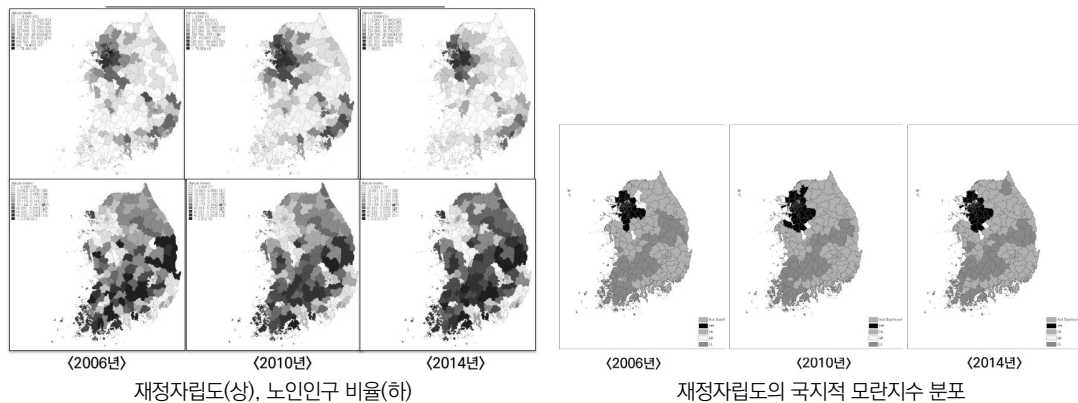
다. 주요 분석 결과

1) 재정자립도의 분포 및 공간적 의존성 양상

[그림 2]의 왼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

이 높은(낮은) 수준의 노인인구 비율과 낮은(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 분포는 지역 인구구조(노인인구 비율)와 재정자립도 균집 간 대칭적 분포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그림 2]의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의 높은 재정자립도의 균집 양상은 집적 경제(국지화·도시화 경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스피로오버(spillover) 현상을 그 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그림 2]의 오른쪽 국지적 모란지수의 분포에서 검은색 지역(특정 지역과 인접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모두 높은 지역, high-high 지역), 푸른색 지역(특정 지역과 인접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모두 낮은 지역, low-low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양상에 대한 여러 논거 중 하나로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 지역내 총생산(GRDP), 부동산 가격 등이 높은 지역에서의 세입원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양상을 제시할 수

그림 2.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 비율 분포, 재정자립도의 국지적 모란지수 분포



자료: 통계청. (2019).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에서 2019. 1. 1. 인출.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구조와 가구소득, 기업체 분포 등이 자치재정 확보를 도모하는 세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구 변화 요인이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2) 연도별 적정공간계량모형

공간계량모형에서는 공간적 의존성과 이질성을 고려하는데 이를 위해 공간 요인인 공간 시차와 공간 오차를 모두 모형에 투입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연도별 LM(lag), LM(error), Robust LM(lag), Robust LM(error) 검정을 통해 공간적 의존성 및 이질성을 살펴보았으나 해당 검정 통계량은 최종 공간계량모형을 선택하는 데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공간 요인의 통계적 유의성에 따라 연도별 적정공간계량모형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형 추정 결과 2006년, 2010년 모형의 경우 공간 시차 요인인 ρ 가, 2014년의 경우 공간 오차 요인인 λ 가 각각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이에 연도별 적정공간계량모형을 제시하였다(표 1).

3)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 비율의 부적(-) 연관성

공간계량모형 분석 결과 노인인구 비율(고령화)과 재정자립도 간 부적(-) 연관성이 도출된바,

이 글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³⁾

먼저 재정자립도의 산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ext{재정자립도} =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일반회계 예산 규모}} \times 100$$

상기 산식과 관련하여 먼저 재정자립도의 분자 인자를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는 지방세 수입과 부적 연관성을 형성할 개연성이 높다. 지방세는 재산세의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주택 수요가 감소하여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지방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고령인구의 소득 대비 재산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여 주택 처분 압력이 외적으로 증가한다. 주택 수요 감소는 주택시장 가격 하락, 재산세 과세 표준의 감소(강성훈, 2015)에 따라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악화(감소)될 개연성이 있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명목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로 인한 취득세수 감소의 개연성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의 분모 인자와 관련하여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가가 일반회계 예산을 증가시킬 개연성을 생각할 수 있

3) 이 글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 비율 간 부적(-) 연관성이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하기의 내용은 결과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논거를 제시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아님을 밝힌다.

표 1. 공간계량모형⁴⁾ 분석 결과

(단위: %)

구분		2006년	2010년	2014년
Constant		0.1448***	0.0649*	0.1909***
경제	단위 인구당 종사자 수	0.2408***	0.2492***	0.2005***
인구	노인인구 비율	-0.7127***	-0.4724***	-0.6578***
	주민등록인구	0.2777***	0.2306***	0.1520***
	연평균 인구증가율	0.6926**	1.3433***	1.3116***
지역	지자체 면적	0.0209	0.0536***	0.0556***
	수도권 더미	0.0773***	0.0748***	0.1086***
ρ		0.1995**	0.2939***	-
λ		-	-	0.4184**
R-squared		0.7917	0.8004	0.7919
관측치 수		225	225	225

주: 1) * p<.1 ** p<.05 *** p<.01

2) 공간가중치행렬⁵⁾(분석 모형에 공간적 연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인접 지역을 정의하는 방법)로 역거리행렬(inverse distance matrix: 지역 간 거리에 반비례하여 공간 가중치를 적용한 행렬)을 적용하였음.

3) 종관측치(기초지자체) 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지자체 수는 229개이나, 실증 분석의 의도에 따라 도서 지역인 제주, 서귀포, 울릉을 제외하고, 2006~2014년의 시간적 범위에 일관성 있는 관찰이 어려운 세종을 제외하여 총 225개 지자체가 분석 대상임.

다. 단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하여 기준 재정수요액의 노인인구 비율과 보정 수요액의 주요 구성 요소로 사회복지 균형 수요가 반영되어 있음을 상기하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증가가 지방세수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한 재정자립도가 감소할 수 있는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의 분모인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증가시키는 반면, 분자의 요인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증가로 인한 재정자립

4) 연도별 공간적 의존성, 이질성 검정 결과 전역적 모란지수(Moran's I)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바, 공간계량모형 적용의 계량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구분	검정 통계량		
	2006년	2010년	2014년
Moran's I	0.5005***	0.5270***	0.4644***
Lagrange Multiplier (lag)	5.1591**	11.6281***	5.2768**
Lagrange Multiplier (error)	0.5558	1.4717	3.6256*
Robust LM (lag)	4.6969**	10.2931***	2.6086
Robust LM (error)	0.0936	0.1367	0.9573

주: * p<0.1 ** p<0.05 *** p<0.01

5) 공간가중치행렬의 구성과 관련하여 rook 방식은 특정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의 경계선이 일부뿐이라도 공유되는 경우를, queen 방식은 특정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가 한 면과 모서리를 공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역거리행렬(inverse distance matrix: 지역 간 거리에 반비례하여 공간 가중치를 적용한 행렬)을 적용하였다. 이는 일부 도서 지역(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군, 전남 완도군, 경남 거제시, 경남 남해군의 5개 지자체)을 모두 고려하기 위함이다.

도 감소 논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4) 단위 인구당 종사자 수, 인구의 양적 수준과 정적(+) 연관성

또한 단위 인구당 종사자 수, 인구가 재정자립도와 정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는 추정 결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 여건 양적 확보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정적(+)으로 연관될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나가며: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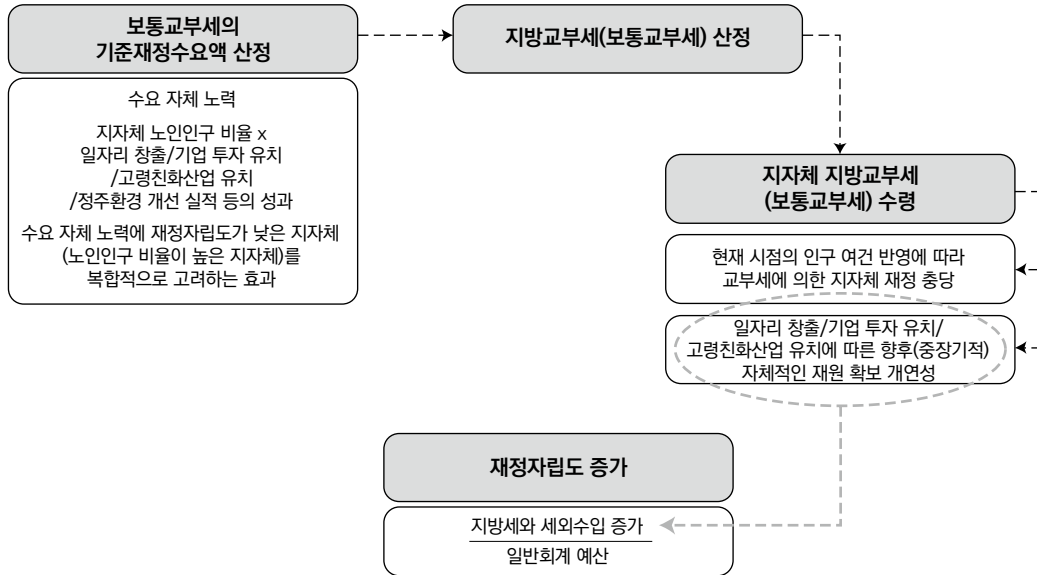
이 글의 분석 결과 논의는 인구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자치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지역 격차(regional disparity)를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자치재정 여건 제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인구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대의 개연성을 상기하면,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복지 재정지출 증가 및 보통교부세,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다.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과 자치재정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의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제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자체가 보통교부세와 같은 중앙정부 재원에 지속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인구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자치재정 여건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추진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자체 자치재정 확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부세의 투자적 활용 목적의 인센티브 항목 보완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재원주의와 자주재원주의⁶⁾의 시각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예산 충당의 재원(재원보장)으로,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세입 기반 확보의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및 인프라 구축 등의 투자 재원으로 인식하여 세입 자치 제고 및 지방재정 자립 확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부문(고용률 증가, 사업체 수 증가)을 수요 자체 노력 항목으로 반영한

6) 일반재원주의는 용도가 지정된 특정보조금을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교부세 등의 일반재원으로 대체하여 지자체의 세출 자치를 보다 신장하는 데 주목하는 것이며, 자주재원주의는 지자체가 자체 세원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를 조달하므로 세입 자치를 보다 신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2019 대한민국 지방재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이 글에서는 지방교부세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일반재원주의의 특징을 견지하여 지자체의 세출 자치를 신장하는 데 주목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자주재원주의의 특징 역시 고려하여 세입 자치 정도를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자립 여건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 재원으로 도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림 3.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수요 자체 노력 산정 보완에 따른 지방재정 자립 여건 제고 흐름



자료: 저자 작성.

것은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교부세의 투자 성격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보통교부세의 보정 수요 중 사회복지 균형 수요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수요 자체 노력과 관련하여 노인인구 비율 등 인구구조 특성을 뜻하는 현재 수요 여건에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유치, 고령친화산업 유치 성과를 가중하여 고려하는 경우 더욱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지방교부세 인상이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수요 자체 노력이 반영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여 지자체가 수령하면 현재 시점의 인구 여건 반영에 따라 지자체 재정을 총당함과 동시에 수요 자체 노력에서 반영된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유치 등의 성과가 중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는 지방재정 자립 여건이 제고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수요 자체 노력은 대부분 비용 절감 측면에서의 항목이 산입되어 있는데,⁷⁾ 이 글에서 제시하는 지역 인구 변화

를 고려하는 투자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들이 더 많이 반영, 산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기 논의는 각 지자체의 인구구조 및 여건의 격차가 존재하여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재정 여건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수요 자체 노력을 경주할 유인이 낮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지방교부세 교부와 관련하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비용 절감이 투자 성과에 비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낮기 때문에 굳이 투자 성과를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자체 거버넌스 통합 등을 통하여 현재의 지자체 간 인구구조 및 재정 여건의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기 논의는 궁극적으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 통합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인구 변화를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방세수 기반 확보 방안으로, 고령인구에 특화된 지역경제 발전을 통하여 지방세수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바, 인구 고령화 심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지구 육성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고령인구에 특화된 지역경제 발전 대안으로 인구 고령화 심화 지역과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지구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

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여가, 요양, 식품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인구 유입 등에 따른 집적 경제(국지화경제, 도시화경제)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적으로 신규 기업 입주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 및 실적 개선의 성과를 보여 준 나주 혁신도시 사례는 이러한 논의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안과 관련하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한 기술적, 질적 발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초기 진입에 대한 장려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친화형 농촌 환경 사업의 지속 추진 역시 고령인구에 특화된 지역경제 발전 방향으로 이해된다. 이는 고령인구의 경제적 활동 기반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방세수 확보를 담보하는 지자체의 자생적 경제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성훈. (2015). 인구구조 변화와 재산세 부담: 주택을 중심으로, KERI Insight 14-15.
 국회예산정책처. (2019). 2019 대한민국 지방재정.
 김종순. (2018).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8년도 연구용역보

7) 2019년 기준재정수요액의 수요 자체 노력 항목은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지방청사 관리·운영, 민간 위탁금 절감, 일자리 창출, 예산 집행 노력(2019년 신설), 읍·면·동 통합 운영(2013년 통합까지 적용)의 총 9개 항목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2019 대한민국 지방재정 참고).

고서. 국회예산정책처.

이창균. (2015).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
기준 개편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통계청. (2019).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YL
2092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YL
2063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에서 2019. 1. 1. 인출.

행정안전부. (2019). [http://www.index.go.kr/
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
_cd=245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8)에서 2020. 1. 25. 인출.